



## 일러두기

- 본 통일교육지침서는 각급 학교(초·중·고)에서 통일교육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일선 교육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각급 학교에서는 본 통일교육지침서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내용체계 및 지도방향, 권고사항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과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서울 강북구 4.19길 275, 전화 901-704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009 통일교육 지침서



# 목 차

I. 통일교육의 목표	07
-------------	----

## II.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1.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성	15
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극복	15
나. 통일의 당위성 인식과 통일외지 확립	16
다. 통일시대 대비 역량 강화	16
2.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17
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17
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17
다.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18
라.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18
마.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19

## III.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문제의 이해	23
가. 통일문제의 성격	23
나. 분단의 배경과 폐해	24
다. 통일의 필요성	26
라. 통일의 접근방식	28
마. 통일국가의 미래상	29
2. 북한 이해	31
가. 북한에 대한 인식	31
나. 북한의 정치·외교	32
다. 북한의 군사	36
라. 북한의 경제	37
마. 북한의 사회·문화	40
바. 북한의 변화 전망	45

3. 통일환경의 이해 .....	47
가. 국제정세의 변화 .....	47
나.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	48
4. 통일정책 .....	50
가. 우리의 통일방안 .....	50
나.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	51
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	55
5. 통일을 위한 과제 .....	61

#### IV. 학교급별 및 교육과정별 권고사항

1. 학교급별 권고사항 .....	67
가. 초등학교 .....	67
나. 중·고등학교 .....	68
2. 교과별 권고사항 .....	70
가. 국어과 .....	70
나. 도덕과 .....	70
다. 사회과 .....	71
라. 예체능과 .....	72
3. 정규과정 외 교육활동에 관한 권고사항 .....	73
4. 재량활동에 관한 권고사항 .....	74
5. 사이버 통일교육에 관한 권고사항 .....	75

#### 부록

현장 통일교육 안내 .....	78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	87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웹사이트 .....	88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방송프로그램 .....	90
통일교육지원법 .....	91



# I

##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통일교육의 목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한 우리나라 헌법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다음의 세부적 목표들을 추구한다.

## 1.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

우리 헌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남북한이 하나가 된 민족공동체의 틀 속에서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남북한 구성원들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사회적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통일한국에서도 민족 화합을 이끌어내는 주도적 이념으로 작용할 것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통일한국이라는 정치공동체는 그 인식의 토대를 민족적 유대로부

터 찾는다. 민족공동체 의식은 장기간의 분단 상황 속에서 파생된 남북한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며 통일한국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순조롭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토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지향적 통일관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이 선순환적 구조를 이루는 정치공동체로서의 통일한국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이 상호 조화롭게 융해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통일관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의 함양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사명감을 신장시키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자원들이 남북한간의 소모적 경쟁에 소비되고 있다. 통일의 달성은 이러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민족의 위상과 역량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단순히 의지의 표출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으며, 통일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길러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 및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어내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노력도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3. 통일환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21세기의 국제정치 질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관계 변화와 북한 사회의 변화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통일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 통일 환경과 북한의 실상 등에 대해 국민들이 왜곡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관점에서 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평화적 통일을 위한 현실적 정책대안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에는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문제 등에서 비롯되는 여러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이들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 역량이 갖추어질 때만 통일의 노력이 생산적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 II

##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1.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성
2.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 1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성

최근 청소년들은 남북분단의 문제를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문제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도 기성세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시키고, 객관적 판단 능력을 신장시키며, 평화와 통일을 일구어갈 수 있는 실천 의지와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 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극복

통일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부정적 인식은 분단체제의 장기화가 빚어낸 남북간 격차 및 이질성의 심화, 그리고 통합과정에서 야기될 비용과 혼란 등 통일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남북한간 경쟁과 대결로 인해 분단 상황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통일이 가져올 이익에 비하면 훨씬 적은 것이다. 통일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위상 제고와 경제적 기회의 증대, 사회적·심리적 안정 등과 같은 실질적 편익을 가져올 것이다.

통일교육의 중요한 과제는 이처럼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장애가 되는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분단으로 위축된 민족의 역량을 드높일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 나. 통일의 당위성 인식과 통일의지 확립

남북한 분단과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분단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고 6·25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간의 시각 차이가 크고, 지향하는 가치관과 이념에 따라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등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학교 통일교육은 분단의 고통을 몸소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민족적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는 사명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 다. 통일시대 대비 역량 강화

다가올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통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통일은 단순히 제도적인 통합만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통합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통일을 완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의 미래상은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고, 성숙된 민주시민 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우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상호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민주시민 의식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야 한다.

## 2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 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세대가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단 이후 세대들은 민족사적 당위성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 것인지 등의 현실적인 이유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낀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통일 이후 얻을 수 있는 이득과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분단 상황보다 통일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준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사명감을 갖도록 한다.

### 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단순히 정부 형태의 비교를 넘어 생활 방식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이를 기초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우리의 내적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절차에 대한 이해, 민주적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신장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민주시민 의식은 사회성원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자질임을 인식해야 한다.

#### 다.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통일은 단순히 분단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은 북한주민을 동정심이나 우월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같은 민족이자 상생·공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족 우월주의와 민족 지상주의와 같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공동체는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닌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도 존중하는 열린 민족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 라.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냉엄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의 유지·보존을 위한 국가안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마.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통일을 만들어야 할 상생과 공존의 대상임과 동시에 분단이 해소되기까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이 협력의 대상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균형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분단 이후 이질적인 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과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 전반을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III

##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 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4. 통일정책
5. 통일을 위한 과제



# 1 통일문제의 이해

## 가. 통일문제의 성격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인해 양분되었다. 이후 북한의 도발에 의한 6·25전쟁으로 남북한간에는 상호 증오심과 적개심이 깊어졌으며,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한간의 심리적 분단도 고착화되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요충지가 되어 왔고 한반도의 통일문제에도 이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적 특성을 갖게 된다.

남북한 당사자의 노력과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의 이중적 특성을 감안할 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주변국의 관심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자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자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은 역사적 당위성을 지니며 주변국들의 이익과도 부합할 수 있음을 대외적으로 설득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통일노력에 대한 이들 주변국의 지원과 협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통일문제의 이중성을 이해시킴으로써 통일이 우리 민족의 결집된 노력과 함께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 가능함을 인식시킨다.

## 나. 분단의 배경과 폐해

### 1) 분단의 배경

통일을 왜 이루어야 하고 어떻게 이를 것인가를 논의하려면, 먼저 현재의 남북 분단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성격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의 식민통치와 뒤이은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지리적 분단이 이루어졌다.**

남북 분단의 기원은 서구 열강의 세계 분할지배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통치로 소급될 수 있다. 이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측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다.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된 한반도에서는 미·소 간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면서 지리적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남북이 각각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정치적 분단이 이루어졌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영국·소련이 한반도 신탁통치를 결의하자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은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여부로 갈려 상호 대립하게 되었다. 결국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이 초래되었다.

### 6·25전쟁으로 심리적 분단이 심화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6·25전쟁은 민족구성원 상호간의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심리적 분단으로 이어져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 2) 분단의 폐해

분단은 개인적 차원에서 정신적·물질적 희생과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고, 민족적 차원에서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분단은 남북한간 대결구도를 지속시킴으로써 조화로운 민족공동체의 삶을 펼칠 기회를 제약해 왔다.**

분단 상황은 남북한 사이에 소모적인 군비경쟁과 체제경쟁을 유발하고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내재한 군사적 대립을 존속시켰다. 이같은 대립과 전쟁의 위험성은 다양한 경제적 부대비용을 초래하면서 남북한의 경제발전 추동력을 제약하였다.

아울러 분단 상황은 수많은 이산가족들과 납북역류자·국군포로 가족들이 혈육과 이별한 채 살아야 하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또한 남북한의 적대적 대결구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

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분단은 남한에서 대륙으로 통하는 통로를 단절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의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발전 기회를 박탈해 왔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길목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의 육로 통행이 차단됨으로써 사회·문화·경제적 발전이 크게 저해받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한반도 분단이 국제적 요인과 민족 내부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단극복을 위한 통일과정도 남북한간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라는 이중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인식시킨다.

분단의 장기화가 개인의 삶과 민족 전체의 발전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과 폐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일깨워 준다.

## 다. 통일의 필요성

통일은 분단으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구현시킨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60여 년에 걸친 남북분단은 민족구성원간 상호 불신,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며 민족통합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어 왔다. 통일국가의 실현은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재결집시키고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통일은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한다.**

분단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남북으로 갈려있는 이산가족들이다. 남북간 분단 상황에서 장기간 교류와 왕래가 끊긴 채 고통 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은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창출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번영의 중심국가로 이끈다.**

통일은 한반도에 단일 경제권을 형성시킴으로써 내수 시장의 확대와 함께 남북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보완성을 높여 경제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다. 남북이 통합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북아 시대의 번영을 주도할 것이다.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없애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한다.**

분단구조 아래서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는 남북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없애고 동북아 지역의 불안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분단의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이 나와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 줄 긍정적인 의미와 이익이 무엇인가를 이해시킴으로써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 라. 통일의 접근방식

통일은 남북간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

통일은 전쟁 등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민족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력에 의한 방식은 민족의 비극을 초래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민족공멸의 상황을 가져올 것이다.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화해협력의 정신에 의거하여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 등 다각적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남북한이 통일역량을 점진적으로 구축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야 한다.

오랜 분단에서 비롯된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체제의 차이, 경제적 격차, 문화적 이질성 등을 극복하면서 통일 기반을 착실히 다져야 통일이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점진적으로 통일 역량을 구축해 갈 때 공존공영을 위한 민족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남북한이 포괄적 교류협력관계를 발전 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남북한 협력공동체를 달성할 때 실질적인 통일 상황이 구현될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통합 과정을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이 필수적임을 인지시킨다.

**마.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한국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통일의 결실을 공유하는 진정한 민족공동체 국가를 실현시킨다.

통일 직후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 경제력의 격차, 사회·문화적 가치 및 관습의 차이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통일 국가는 이러한 격차와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하나의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 민족공동체는 혈연적 의미의 폐쇄적 민족 개념을 넘어서서 열린 민족의 개념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통일된 한국사회 역시 다문화 사회라는 21세기의 시대적 조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은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는 선진 복지국가를 구현한다.

통일국가는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가 존중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가 보장되는 사회이어야 한다. 또한 민족의 총체적 역량이 발현된 선진경제를 기반으로 풍요의 혜택이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국가가 구현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구성원들은 활동영역의 확대와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향유

한다.

통일한국은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전쟁 위협 소멸에 따른 군사비 감소, 자연자원과 인적 자원의 상호보완적 활용 등이 가능하며, 국제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인구 8천만 명 수준의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이 고양될 것이다.

또한, 통일 한국의 구성원 개개인은 보다 개방된 공간을 배경으로 거주, 여행, 결혼, 직업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고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한다.**

통일은 아시아 대륙 및 유럽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열린 공간의 시대를 한민족에게 제공할 것이므로 통일한국은 21세기의 동북아시아대를 선도하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통일국가의 미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며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도록 한다.

## 2 북한 이해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즉,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전반적 실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은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다.**

분단이 해소되기까지 북한은 우리와 함께 통일을 만들어 갈 동반자이자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까지 대결의 상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고, 반대로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분단구조 하에 있는 남북한 현실을 경시하는 통일 지상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가운데 서로간의 적대의식을 감소시키고 동포애를 발휘하여 북한을 평화공존의 동반자 관계로 이끌어가는 지혜와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인식이 필요하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상이한 체제를 유지해온 결과, 법적·체제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점들이 존재한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이질적인 요소에 대한 객관

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는 단순히 드러난 현상을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야기하는 작동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확한 자료와 정보에 바탕을 두고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적·균형적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 북한에 대한 이해는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실천적 차원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이해는 남북한 주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이해함으로써 북한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출 수 있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가치관 등 그들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이 통일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이해시키고,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사회 전반의 실상을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나. 북한의 정치·외교

### 1)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북한체제는 수령과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전 사회가 일원적으로 편제된 유일지배체제이다.

북한체제는 수령의 사상, 즉 주체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혁명과 건설을 수

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유일지배체제이다. 유일지배체제는 권력이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령을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일원적으로 재구성된 체제이다.

김일성-김정일의 절대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이론들은 지도자를 ‘인민 대중의 최고 뇌수’,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해주는 아버지’로 규정하고 북한주민에게 절대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와 개인숭배를 통해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지도자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주어진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한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를 토대로 하면서,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先軍政治)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김정일의 절대 권력과 이들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통치체제인 동시에 집단적 소유와 계획경제, 당-국가의 지배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산주의체제의 기본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당-국가체제에서 당은 국가권력의 원천으로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지니고 타 국가기관보다 상위에 위치하며, 모든 국가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추진된다.

당-국가체제는 1990년대 중반 김일성의 사망과 극심한 경제난, 대외고립 등의 위기 상황에서 군 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후 북한은 체제유지와 위기관리를 위해 군대를 내세워 체제의 균열과 붕괴를 막기 위한 선군정치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선군정치는 군이 당보다 권력우위에 있다기보다는 군대가 노동계급을 대신해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대는 국가보위와 경제건설, 혁명적 군인정신의 사회

적 확산 등 국가 전반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나, 정작 선군은 군림의 수단이 되어 군대의 부패와 주민 착취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 정치체제는 김일성-김정일의 절대권력과 주체사상에 지배되는 퇴행적인 체제적 특이성과 당-국가의 지배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산주의체제의 일반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김정일 집권 이후 선군정치를 앞세워 주민통제와 체제운영을 하고 있는 실상을 규명하도록 한다.

## 2) 북한의 대외정책

탈냉전 이후 북한은 체제의 안정성과 생존에 초점을 두고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등 외교의 다변화를 통한 실리를 꾀하고 있다.

냉전시기 북한은 체제유지와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필요한 국제적 여건 조성을 목표로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탈냉전 이후에는 체제의 안정성과 생존에 초점을 두고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체제 안정성의 확보와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일본과의 관계 진전, 그리고 중국·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증진을 시도함으로써 국제고립을 탈피하고 대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보장을 위한 핵심 관건으로 보고, 대미 대결정책을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유럽연합(EU), 호주 등 선진 국가들과 수교를 확대해 오면

서 경제적·인도적 지원의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동남아 국가들과의 자원외교를 강화하는 등 체제 생존과 실리 획득을 위한 전방위 외교도 추진하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통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방식의 대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냉전 종식 이후,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핵과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북한은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을 수단화하여 국제사회에 대결 분위기를 조성한 후,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얻어내려는 방식의 대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 과정에서 위협과 협상을 반복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대외전략은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켜 왔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와 2000년 북-미 공동커뮤니케, 그리고 6자 회담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이어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 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9년 들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국제사회와 대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 우호관계 증진을 통해 대미견제와 체제보장을 기하려는 북한의 전략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전통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압박정책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 경제·외교 등 다방면에 걸친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시대와 달리, 미국과 중·러의 관계는 거시적인 관점에 있어서 갈등보다는 상호 이익을 위한 전략적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북한의 외교 전략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탈냉전 이후 북한이 경제회생과 체제보장을 위해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공세적인 대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관계의 현실과 북한 특유의 외교전략을 설명한 후 그것이 통일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 다. 북한의 군사

북한은 체제유지 및 대외협상을 위한 도구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북한의 군은 노동당의 혁명무력으로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방과 경제건설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북한은 현재 119만 명의 정규군과 함께 인구의 약 30%를 예비 병력으로 보유하는 등 병력 보유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경제력의 상당 부분을 군사비로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휴전 이후 무기의 자급자족을 위해 많은 군수공장을 건설하는 등 군수산업의 발전에 치중해 왔다. 그 결과 일부 전자 및 정밀 유도

무기, 고도의 항공장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장거리 포,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 각종 전략무기를 개발 배치하는 등 무력증강을 꾀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무력증강 움직임은 대남 군사우위 및 대외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뿐 아니라 필요시 이를 사용하여 대남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악화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고, 군사 훈련과 군수품 보급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은 자위국방의 원칙에 의해 군수산업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 라. 북한의 경제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시장경제 기능을 일부 도입하는 경제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1960년대 초반에 완료하고, 중앙의 계획당국이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기관 등에 생산지표와 경영지표를 하달하는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

1990년대 경제난이 심화된 이후 계획경제체제가 마비되고 자생적인 시장경제가 발달하자 2002년 이를 통제하기 위해 시장경제 기능을 일부 도

입하는 등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계획경제체제의 유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있다.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대외 경제관계가 급격히 축소되고 자연재해도 연속적으로 겹치면서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식량난, 에너지난, 생필품난, 외화난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다.

북한 경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자구 노력을 통해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계획경제체제의 내재적 한계와 지속적인 에너지난으로 인해 2006년 이후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우선시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국방공업을 우선하면서 경공업, 농업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기본 경제정책 노선으로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실리사회주의 노선도 병행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였지만, 최근 이러한 조치들이 후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차원에서 계획경제의 틀 내에서 시장기능을 일부 활용하는 7.1조치를 시행하였다. 7.1조치는 가격 및 임금 현실화, 종합시장 도입 등 계획경제를 일부 수정하고 시장기능을 일부 도입한 조치이다.

7.1조치는 일부 경제현장에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고 주민들의 소비경제

를 활성화시키기도 했지만, 시장이 전국적 범위로 확산되고 계획경제가 오히려 시장에 의존하는 현상을 야기하였다. 이를 우려한 북한은 최근에 시장을 통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점진적이며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와의 경제관계 구축이 불가피해지자 점진적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해 왔다.

1991년에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개설하고, 2002년에는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을 제정하여 경제특구의 확대를 시도했다. 신의주특구는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고, 남한자본이 단독 투자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만이 설치되었다.

북한은 대외경제관련 법들을 투자유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평양 등 내륙지역에 중국을 비롯하여 중동, 러시아,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경제강국 건설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미관계·남북관계 등 대외관계에서의 체제생존을 우선시하면서 개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시장경제 기능을 일부 도입하는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시장의 발달, 그리고 최근 북한당국의 시장통제 정책 등 북한경제의 현실에 대해 이해시킨다.

## 마. 북한의 사회·문화

### 1) 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생활

**북한 주민의 규범적 가치관은 집단주의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로서 토지·자본·공장 등 주요 생산수단을 국유화·집단화해 왔으며, 외형상으로는 주민들에 대해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해왔다. 또한, 헌법에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북한 사회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가치관을 강조해 왔다.

**최근 북한 주민의 가치관은 개인주의적·자본주의적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경제난 이후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강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 기업소나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장마당에서 개인장사를 하거나 텃밭에서 개인농사를 짓는 데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점차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고, 소위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보다는 금전적 인간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돈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 주민이 남한사회의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대남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주민은 북한당국에 의한 사상교양 학습을 통해 남한주민을 ‘혈벗고 굶주린 불쌍한 동포’ 혹은 ‘미제의 압제에 시달리는 해방의 대상’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우리의 대북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남한사회의 발전상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경제난 이후 생계유지를 위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서 정보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주민은 거주이전과 통행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국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생계유지를 위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통행증 발급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무허가 여행을 하는 주민도 늘어났다.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유통이 활발해지고 남한사회를 비롯한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서 북한주민의 의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여성의 생계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다.**

북한은 표면상 남녀평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북한여성은 사회노동과 집안일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과 가부장적 권위주의 아래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중이 커지면서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문화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경제난 이후 가치관과 일상생활의 변화가 북한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탐색해보도록 한다.

## 2) 북한의 교육과 학교생활

**북한 교육의 목표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 육성이다.**

북한의 교육목표는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즉 ‘주체형의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다.

주체형의 인간은 북한체제가 필요로 하는 구성원으로서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제1의 덕목으로 삼고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무장하여 집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영웅적 존재를 의미한다.

**북한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육과 정치의 결합, 교육과 생산의 결합, 교육 내용의 선택권 부재 등이다.**

북한에서 교육은 사상혁명의 핵심 수단으로 여기므로 학교에서도 정치사상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노동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은 생산에 필요한 실제 기술기능을 훈련하고 생산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과 방법은 국가에 의해 규격화되어 하달되므로 개인의 선택여지가 거의 없으며, 정해진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학교교육은 교과수업 외에 청소년 조직활동과 방과 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조직 활동은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북한체제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학생들은 소학교 2학년부터 소년단, 중학교 5학년부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 활동하며, 이러한 조직은 학교생활과 일상에서 학생들이 스스로가 동료학생의 생활을 집단적으로 규율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방과 후에는 개인별 능력과 선호를 반영하여 음악, 체육 등 소조(동아리)에서 활동하고, 학교에서 일을 하거나 농장에 나가 일손을 돕기도 한다. 특히 우수한 실력과 재능을 갖춘 학생으로 선발되면 평양을 비롯하여 각 시·군에 있는 전문교육기관(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에서 음악, 무용, 수예, 태권도, 물리, 수학, 컴퓨터 등의 교육을 받는다.

**경제난 이후 북한은 정치사상 교육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컴퓨터, 외국어 등 실용적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사상적 이완 현상을 막기 위해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IT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중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하고 컴퓨터 수재반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어도 북한이 중요시하는 과목이다. 특히 영어의 인기가 높아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의 교육목적, 교육제도, 교육내용을 이해하며, 우리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고, 최근의 변화 내용을 파악한다.

북한의 학교생활을 파악함으로써 북한학생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우리 학생들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파악한다.

### 3) 북한의 문화

북한의 문화는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을 위한 문화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우리 민족의 고유 전통문화에 사회주의 요소가 가미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명절은 전통적 민족명절 이외에도 김일성·김정일 생일, 정권수립일, 당 창건일, 헌법절 등 북한체제의 특색과 사회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에는 경축 분위기에 맞추어 평양과 지방의 극장에서 예술단체들이 공연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체육대회, 집회 등의 여러 행사들이 진행된다.

북한은 주민들의 사상교양의 수단으로 군중문화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군중문화 활동은 일반 군중들이 참가하여 진행하는 문화활동으로 사상교양 수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연, 담화, 보고, 해설독보, 영화감상, 방송청취, 전시회 관람, 체육경기 등의 형태로 실시된다.

이는 각급 학교나 기관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기동선전대'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술소조'로 나누어진다.

북한주민은 여가활동으로 영화관람, TV시청, 노래 부르기 등을 주로 하고 있다.

북한에서 개인적 여가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노력동원, 회의, 생활총화 등 조직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정규 일과 후에도 개인장사 등 부업으로 여가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 주민들은 영화관람, TV시청, 노래 부르기, 장기 두기 등의 여가 활동을 하며, 낚시, 등산 등을 즐기는 계층도 일부 있다. TV드라마는 김일성 주석의 가계와 항일 혁명투쟁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내용도 많아지고 있다. 명절이나 연휴에는 주로 영화 관람을 하는데, 북한에서 영화는 전파력이 크고 이동 상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북한의 경우 우리 고유의 문화전통이 왜곡되어 사상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한간의 문화적 이질감이 심화되었음을 밝힌다.  
 통일 이후 문화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개인적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 바. 북한의 변화 전망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이른바 ‘북한식’ 개혁·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의 붕괴 원인이 ‘수정주의’를 받아들이고, 당이 군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이 걸어온 변화의 길을 꺼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대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소위 ‘북한식’ 변화의 길을 모색 중이다.

북한이 의도하는 ‘북한식’ 변화란 체제유지를 우선시하는 제한적이며 점진적인 변화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의 변화 사례를 학습하는 한편, 7.1조치 등으로 야기된 거시경제의 불안정, 음성적 시장의 확산 등에 대응하여 개인 경제활동과 시장을 통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체제유지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다.**

북한은 완전한 개혁·개방을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첫째, 주민통제의 문제이다. 북한 주민의 외부세계와의 접촉 확대, 북한 사회로의 외부문화 유입 증대는 주민에 대한 당국의 효과적인 통제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을 우려한다. 북한주민이 훨씬 우월한 남한 체제를 인식하고, 남한과의 통일을 원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관계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폐기 및 인권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지도부는 이러한 외부의 작용을 자신들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개혁·개방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체제유지 우선 및 소극적 개혁·개방 전략으로는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유리한 대외 경제환경의 조성, 선군경제건설 노선에 대한 재검토, 시장지향적인 개혁조치들의 추가적 도입 등을 해야 할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 실태를 알아보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 3 통일환경의 이해

### 가. 국제정세의 변화

오늘날 국제사회는 새로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안정 요인들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대 이래 국제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탈냉전 등의 세계사적 거대 조류를 경험해왔다.

이같은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한경쟁의 격화, 다양한 외부 문화의 유입 등이 초래하는 가치관의 혼란, 테러 및 정보전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증대, 상이한 종교·인종·문화간의 갈등 격화 등 새로운 시대 환경으로 인해 불안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9·11테러 이후, 세계안보질서의 속성 자체가 변화되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환경도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화의 조류가 거세게 밀려오는 시대적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은 점차 이념 대립에서 국익을 위한 국가간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간의 경쟁과 협력 관계는 점차 복잡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9·11테러 이후 재설정된 미국의 외교 기조와 전략이 동북아 지역에 파급효과를 자아내며 기존의 역내 질서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정치대국화 추구, 러시아의 재 부상,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보통국가 주장 등도 동북아 역내 정세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또한, 핵무기,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한 우려 역시 증대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안보는 물론, 역내 안보에도 심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도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국제질서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 및 국제 안보환경과 연계되어 있음을 주지시킨다.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가 남북화해와 통일에 장애요인임을 이해시킨다.

## 나.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의 성격과 내용도 변화한다.

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한·미동맹의 발전적 변화,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동북아 지역협력의 확대, 북핵문제의 우선적 해결 등과 같은 다양한 과제들을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다.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참신한 시각과 접근 방법으로 이들 과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변화하는 통일환경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대내외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통일 환경에 우호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변화된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와 도전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주어진 통일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이해시킨다.

## 4 통일정책

### 가. 우리의 통일방안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1989년 이후 보완·발전시켜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기조 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남북연합」 단계는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도기적 통일체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기 대외적으로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처 등 공동의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통일국가 완성」 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체를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통합을 실현하는 단계로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의 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된다.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우리의 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계를 밟는 것이 바람직한 경로임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나.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정부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데 있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971년 8월 우리측의 제의에 따라 분단 26년 만에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면서 인도적 분야에서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고위 당국자간의 비공개 접촉과 방문을 통해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간 합의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 남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하였다.

제4공화국 정부는 1973년 6월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제5공화국 정부는 1982년 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고, 2월에는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이산가족 편지교류 및 상봉, 설악산-금강산 자유관광지 개발 등을 포함한 20개항의 구체적 시범사업 실천을 제안하였다.

1984년 9월에는 우리측이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받아들이고, 11월에는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성사되었으며,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제6공화국 정부는 1988년 ‘7·7 선언’을 통해 적극적 남북대화 추진 등 북방정책을 도모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제6공화국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을 발표하였다. 7·7선언의 기본 취지는 남북이 서로를 경쟁이나 대결의 상대로 보지 않고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협조하며, 분단의 원인이었던 냉전체제의 극복을 위해 남한은 중국과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북한이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이후 7·7선언을 통한 남북한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의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 1990년 8월 남북교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우리 국민, 기업, 단체 등의 대북접촉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이 같은 날 동시에 공포됨으로써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한편, 1990년 9월에는 남북한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공식적인 남북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이후 1992년 2월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남북한 정부간에 채택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함께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등 총 4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

으며,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향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점증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서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사찰을 회피하지 않고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9년 9월에는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변화된 국제환경에 발맞추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정치적 통합 여건이 성숙되면 단일 민족국가로 이를 수 있다는 것으로 민족통일을 통해서 국가통일까지 실현한다는 것이다.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 아래 우선 남북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이어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완전한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93년 2월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 대화를 모색하면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다 발전시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1차 북핵 위기가 야기되면서 남북관계가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1994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였으나 회담 직전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무산되었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통일의 달성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이 우

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일명 햇볕정책이라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 6월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의 두 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6·15 공동선언’은 통일문제,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경제협력, 당국간 대화 및 김정일 위원장 답방 등에 대한 남북한간의 합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6·15 공동선언문 속의 ‘민족끼리’의 협력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부분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당국간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적십자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대화가 진행되면서 남북한간의 실질적 문제들이 논의되고 실천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이 시기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 상봉, 부산 아시안게임 및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측 선수단 참가 등 다방면에 걸쳐 남북간 교류협력이 양적으로 크게 증대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남북교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안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하여 1999년 6월과 2002년 6월에는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인한 남북 해군 사이의 교전, 2003년 1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등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제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평화변영정책’을 추진하였다.

‘평화변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남북한 및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②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③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2007년 10월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하였다. 선언문을 통해 남북은 상이한 체제에 대한 상호존중을 토대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외교 등의 영역에서 통일을 위한 공동사업들을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변화가 미미한 가운데 합의·추진된 남북간 교류와 협력, 대북지원 등은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미흡하였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남북한간 갈등과 적대 구조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기반을 다지기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곁들여 균형 있게 설명한다.

### 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남북관계 변화, 북핵문제 관련 한반도 정세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론 분열과 일방적 대북지원 주장 등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인해 기존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대북정책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관계의 역학 구도도 변화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통해 우리의 국력이 신장된 가운데 북한 경제의 대남 의존도가 증가하였고, 북한 주민의 대남의식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견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북핵문제가 한반도 정세를 가름하는 주요 변수가 됨에 따라 6자 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의 틀인 동시에 향후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 과정과 관련한 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창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호혜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남북한이 윈-윈(win-win)하면서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그리고 긴장완화를 실현하여 '평화공동체'를 건설하고, 북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참여를 돕고,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이룩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남북 7천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공동체'를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을 실현하기 위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시하였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핵 폐기 결단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남북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대 프로젝트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 폐기의 결단을 내린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내에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핵 폐기 진전 상황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경제재건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5대 분야(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에 걸친 ‘포괄적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비핵·개방·3000 구상」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개념 안에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지니고 있으며, 구상 자체가 하나의 큰 열개로서, 세부 내용은 향후 남북대화를 통해서 유효적절하게 채워나가게 된다. 큰 틀에서 보면 핵문제 해결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는 실천계획을 뜻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라도 인도적 지원과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비핵화의 단계에 맞추어 대북 지원을 확대하여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비핵·개방·3000 구상」은 통일비전을 포함하고 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심화되면서 사실상 남북 경제공동체가 실현될 것이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북한이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 수준에 도달하면, 통일비용도 줄이고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면서 안정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된다는 것은 중산층 성장을 뜻하며, 북한이 이 수준에 도달할 때 남북간 통일에 관한 논의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라는 4가지 원칙 아래 추진한다.

첫째, 실용과 생산성에 입각하여 국민이 동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내는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주민의 삶 개선과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해 나간다.

둘째, 북핵 폐기 원칙은 철저하게 견지하여 원칙있고 성과있는 대화를 추진하되, 그 접근방식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간다.

셋째,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상시화하며, 생산적이고 투명하게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해 나간다.

넷째,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유관국과의 조율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조를 확보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을 지향해 나간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정착,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협,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 인도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남북간 모든 문제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상호 존중과 비방금지 등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회담문화를 정착시키며 이를 통해 정치적 신뢰를 쌓아가도록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셋째, 상생과 호혜의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을 이루며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지향

한다. 다만 남북경협 사업은 북핵문제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의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넷째,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민간 부문의 교류를 촉진하되 내실화를 기하며, 사회문화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화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다섯째, 인도적 문제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해결하여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한다. 북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하고 대북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진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우리 대북정책의 전환과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을 의도하여 2008년 3월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4월 이후 노동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우리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남 비난을 강화하는 등 남북관계의 경색을 야기하였다.

특히 7월 11일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우리측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금강산 관광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우리 정부의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우리측 관광객의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 요구를 거부하였다.

12월 1일부터는 우리측 인원의 군사분계선 통행을 제한하고 개성공단 내 상주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마침내 2009년 1월에는 대남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 개최를 거듭 제의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우리 정부가 교체되면 대남 비난을 강화하면서 남북대

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국민의 정부 시기에는 5회에 걸쳐 34개월 동안 남북대화를 중단하였고, 참여정부 시기에도 2회에 걸쳐 16개월 동안 중단하였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우리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비전과 추진원칙, 중점추진과제 등을 설명한다.

## 5 통일을 위한 과제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통일문제에 동참한다는 의식과 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통일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해관계로 그치지 않고 개인적 차원의 이해와도 직결되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즉, 통일문제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인문제이기도 함을 이해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통일 논의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통일이 가져오는 이익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 부담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내에 민주시민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만큼이나 사회적 책임감을 자각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통일한국으로의 출발점은 사회 구성원간의 차이를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민주주의의 실천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현안들조차도 민주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풀지 못한다면 남북한의 차이를 극복하는 통일의 과제는 더욱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

는 역량을 갖추어야만, 향후 남북의 조화로운 통합도 기대할 수 있다.

북한동포의 이질성을 감싸 안으려는 자세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주시민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다. 또한 북한동포의 행복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 안보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남과 북은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스스로 국가안보를 확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의식과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생산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확대는 남북한간의 불신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신뢰구축을 통해서 한반도에 상생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방면에서 남북한간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한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상생·공영하는 관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경제, 사회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류협력이 미진한 정치, 군사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균형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은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시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쌓아가는

노력과 인내가 요구된다.

**통일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은 통일의 달성을 위한 필수적 외부 조건이다. 한반도 주변국들과 다면적 협력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들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한국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변국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현 단계의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킨다.

통일 한국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구분하여 이해하고,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주지시킨다.



# IV

## 학교급별 및 교육과정별 권고사항

1. 학교급별 권고사항
2. 교과별 권고사항
3. 정규과정 외 교육활동에 관한 권고사항
4. 재량활동에 관한 권고사항
5. 사이버 통일교육에 관한 권고사항



# 1 학교급별 권고사항

학교 통일교육은 앞에서 제시한 통일교육 내용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학습과정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 가. 초등학교

- (1) 초등학생들에게는 개념이나 기능 중심의 통일교육이 아니라 상황 중심(또는 생활 중심), 바람직한 가치 및 태도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2)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정서적 접근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흥미를 북돋우는 접근을 중요시해야 한다. 즉, 초등교육 단계의 학생들에게는 통일이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일들, 예컨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우리의 경기력 상승, 북한에 있는 고구려의 문화 유적, 북한 지역으로의 여행뿐 아니라 나아가 경의선을 통한 유럽 배낭여행도 가능한 점 등 개개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이점을 강조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 (3) 분단의 아픔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 분단 극복의 문제를 정서적인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분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4)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언어와 역사, 전통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남북한의 위치와 상징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의 국가였으나 국제적 요인과 민족 내부적 요인에 의해 분단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5) 분단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며 나아가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희망하고 이루려는 마음과 기초적인 통일 의지가 내면화될 수 있어야 한다.

## 나. 중·고등학교

- (1) 중·고등학교 단계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이며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통일·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중학교 통일교육에서는 안보의 중요성, 외국의 통일사례, 우리나라 역사 속의 통일 사례, 현재 우리나라의 통일 노력, 남북분단의 원인과 폐해, 한민족의 유래와 분단의 역사적 전개과정, 북한의 지배체제, 이데올로기 및 사회·경제·문화·교육적 상황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통일의 필요성을 민족사적, 평화적, 인도주의적, 국제관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독일, 베트남, 예멘 등 과거 분단국의 통일 사례 연구를 통해 통일준비 방법, 바람직한 통일국가상 등을 탐구하도록 한다.

- (3) 고등학교 통일교육 과정에서는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문제를 종합적·체계적·논리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한다.
- 먼저 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학생들의 통일·북한관련 지식을 체계화시켜야 한다.
  - 아울러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예상해 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지도한다.
  - 북한 이해의 측면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이중성, 북한사회가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 북한사회 통합의 원리와 주민 및 학생들의 생활과 가치관, 북한의 문화예술과 교육 등에 대한 균형적 이해를 가지도록 한다.
  - 고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밖의 통일 문제를 수업 상황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 (4)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체계적인 통일·북한관련 지식을 토대로 통일 문제를 한반도라는 시각을 넘어 동북아와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 2 교과별 권고사항

### 가. 국어과

- (1) 국어과 교육에서는 문학적 차원에서 남북한의 문학과 언어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그 동질성과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 (2) 남북한 언어비교를 통한 이질성의 확인에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한의 언어가 이질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동질적 측면도 있으므로 서로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여 우리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한다.

### 나. 도덕과

- (1) 도덕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통일·북한관련 문제를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로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른 교과 통일교육의 기초가 되는 교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 (2) 도덕과는 북한 및 통일문제 전반에 대해 도덕적 가치와 인도주의,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권·자유·평등 등)에 입각하여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함양하여야 한다.
- (3)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적응문제는 남북한 사회통합의 중요한 과

- 제이고 통일의 예비 실험적인 의의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 (4) 도덕과에서는 분단의 원인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간의 국제 관계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 (5) 도덕과는 가치와 이념 및 미래상을 다루되, 이러한 추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북한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사상, 가치규범체계, 법의식 등)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6) 도덕과는 사실을 중요시하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가치의 문제를 중요시하므로, 전쟁의 폐해와 위험, 바람직한 통일의 길, 올바른 북한이해, 통일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 통일을 위해 갖추어야 할 덕성 등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 다. 사회과

- (1) 사회과 교육은 지리, 역사, 일반사회를 관련시킨 통합적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하도록 하는 행동 영역의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에서는 남북한의 교역량을 비롯한 객관적 이해 자료의 내용을 지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한의 근현대사를 통해 통일·북한관련 문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 (2) ‘인간과 사회’ 영역에서는 남북한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실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북한의 지배체제, 이데올로기 및 사회경제적 상황의 주요 특징들을 다루어야 한다.

- (3) ‘인간과 지리’ 영역에서는 북한 지역의 위치적 특성과 교통망, 자원 분포 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경학적(地經學的)으로 동북아 경제축의 중심인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4) ‘인간과 시간’ 영역에서는 우리 근·현대사의 주요 사항들, 예를 들어 실학사상, 개화운동과 동학농민운동,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강점, 3·1독립운동,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항복, 광복과 남북분단 등을 가르쳐야 한다. 특히 공산주의를 다룰 때에는 소련과 중국의 팽창 정책과 그것으로 야기된 남북분단과 6·25전쟁 등이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광복 이후의 역사는 특히 고학년에서 다루어지는데, 미·소 연합군의 점령으로 인한 한반도 분할,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수립,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남북 긴장관계 속에서 냉전체제의 형성 및 그 의미, 1970년대 초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긴장완화 노력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 라. 예체능과

- (1) 음악과, 미술과, 체육과에서도 남북문제 및 북한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음악·미술·체육에 대한 이해, 남북한간 예체능 분야의 이질성과 동질성 인식 등을 통해 남북한이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특히, 음악과와 미술과에서 남북한의 문예정책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측면보다는 남북한의 미술작품이나 음악을 직접 감상해 봄으로써 동질성과 이질성을 정서적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정규과정 외 교육활동에 관한 권고사항

- (1) 학생들의 통일실현의지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학생회, 계발활동, 축제, 수학여행, 현장 체험 학습, 봉사활동 등 특별활동과 학교 행사 활동을 활용하는 것은 통일교육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 (2) 학생들의 활동공간인 계발활동은 통일문제를 학생들의 관심사로 끌어들이어 일상생활에서 체험과 실천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 능동적인 계발활동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유발을 할 수 있으므로 통일 관련 시사반, 통일반, 신문반, 방송반, 연극반 등과 같은 계발활동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 (3) 학교행사에서는 통일·북한관련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통일가요제, 통일축제, 통일 사이버 문예대회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도록 한다.
- (4) 학생회를 중심으로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 북한이탈주민 가족 돕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북한주민을 동포이자 이웃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 (5) 현장체험학습 활동으로 분단의 상징적 지역이나 통일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장소, 즉 남북출입사무소, 판문점, 통일전망대, 비무장지대(DMZ), 통일관 등을 견학하도록 함으로써 분단이나 통일문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6) 학생들의 수련활동도 단순히 심신 수련의 차원을 넘어 통일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어 학교의 교과교육 차원에서 담아내기 힘든 통일교육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 4 재량활동에 관한 권고사항

- (1) 재량활동시간에는 통일·북한관련 주제를 탐구하는 활동이나 소집단 공동연구 등을 통해 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통일·북한관련 주제를 다룰 때에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예컨대, 북한 학생의 여가생활 등)나 학생들이 관심을 두는 시사성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 (3) 학생들이 재량활동시간에 통일·북한관련 주제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자율적 토론과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4) 토론의 결과는 가능한 범위에서 학생들의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 탈북 청소년 등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북한의 실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북한이탈주민을 통일교육에 초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02-591-3822~5)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5 사이버 통일교육에 관한 권고사항

### 가. 사이버 통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 (1) 통일교육도 사회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법과 내용을 활용하여야 한다. IT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교육,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을 적극 활성화함으로써 물리적 공간 제약이나 시간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청소년들은 컴퓨터나 새로운 매체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사이버 공간을 물리적 공간 이상으로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과 정보화 기기의 접근과 활용에 친숙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이버 통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나. 사이버 통일교육의 콘텐츠 활용 방법 및 유의점

- (1)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보와 자료가 다양하면서도 무한대로 존재하지만,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그리고 건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여과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2)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에 관한 자료를 접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마련된 제도나 정책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 실제의 시행에서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 (3) 이념적 편향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되는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그 사이트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충분한 사전적 설명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북한의 생활에 관한 자료나 최근의 북한 관련 자료들은 객관적 검증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으므로 통일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자료를 출발점으로 하여 점차 민간 기관의 영역별 심화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바람직한 사이버 통일교육 방향

- (1) E-learning(사이버 학습), U-learning(유비쿼터스 학습) 기반 학습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통일교육 관련 자료 탐색과 학생들의 과제 작성, 수업 과정에서 웹 기반 통일교육 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2) 통일부 및 통일교육원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서 각 대학이나 연구소, 그리고 통일 및 대북 민간 기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영역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지도 교사가 사전에 검증한 후 학생들이 접근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부 록

현장 통일교육 안내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웹사이트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방송프로그램

통일교육지원법

## 현장 통일교육 안내

### 통일관

통일관은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이 각종 통일관련 전시물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과 남북관계 현황, 통일환경 및 안보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통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통일체험학습의 장이다.

통일관은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 학교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통일관에 각종 전시자료, 북한관련 특수자료 및 영상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 ■ 전시자료

- 통일노력의 발자취와 오늘의 남북관계를 알려주는 패널 자료
-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실상 자료
- 북한위성TV 및 영화 등 영상자료, 노동신문 등 간행물 자료(8곳)
- 북한 생활용품(오두산, 서울 등 2곳은 소학교와 살림집 모형도 전시)

#### ■ 관람시간

-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 관람시간은 각 지역 통일관의 사정에 따라 1~2시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통일관에 따라 일/월/화요일, 명절 등에 휴관, 또는 연중 무휴 개관

## ■ 전국 통일관 현황

통일관명	위 치	운영주체	연락처	휴관
서 울	서울시 구로구 공동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02)2613-5556	격주 토, 휴일
인 천	인천 남구 송의4동 수봉공원내 자유회관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032)868-0113	월
오두산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통일전망대	(주)동화진흥	031)945-3171, 3173	무휴
고 성	강원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	(주)통일전망대	033)682-0088	무휴
양 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편치불지구	양구군	033)481-9021	월
철 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철의삼각지	철원군	033)450-5046	화, 명절
대 전	대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엑스포과학공원	042)866-5046, 5164	월
충 남	충남 공주시 웅진동	자유총연맹 충남지회	041)881-1212	월, 명절
청 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랜드	청주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043)200-4710	월, 명절
광 주	광주 서구 화정2동 화정근린공원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062)385-1301~2	월
부 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자유회관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051)808-7960~3	무휴
경 남	경남 창원시 용지동 자유회관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055)282-2332~3	일
제 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064)751-0191~2	일

## 오두산 통일전망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는 임진강 너머 북한 지역이 바라다 보인다. 황해북도 개성시 관산지역의 주택과 각종 시설, 도로와 논밭, 주민의 농사짓는 모습 등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이 전망대 내에 있는 통일관에서는 북한의 실상과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수 있다.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와 의·식·주생활에 대한 설명 자료와 함께 교과서, 신문, 각종 생활용품 등 북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북한의 공연, 만화영화, TV 등의 영상물도 상영된다.

또한 통일노력의 역사와 현황도 살펴볼 수 있으며, 북한에 위탁가공으로 생산한 제품들과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 ■ 관람시간 (입장가능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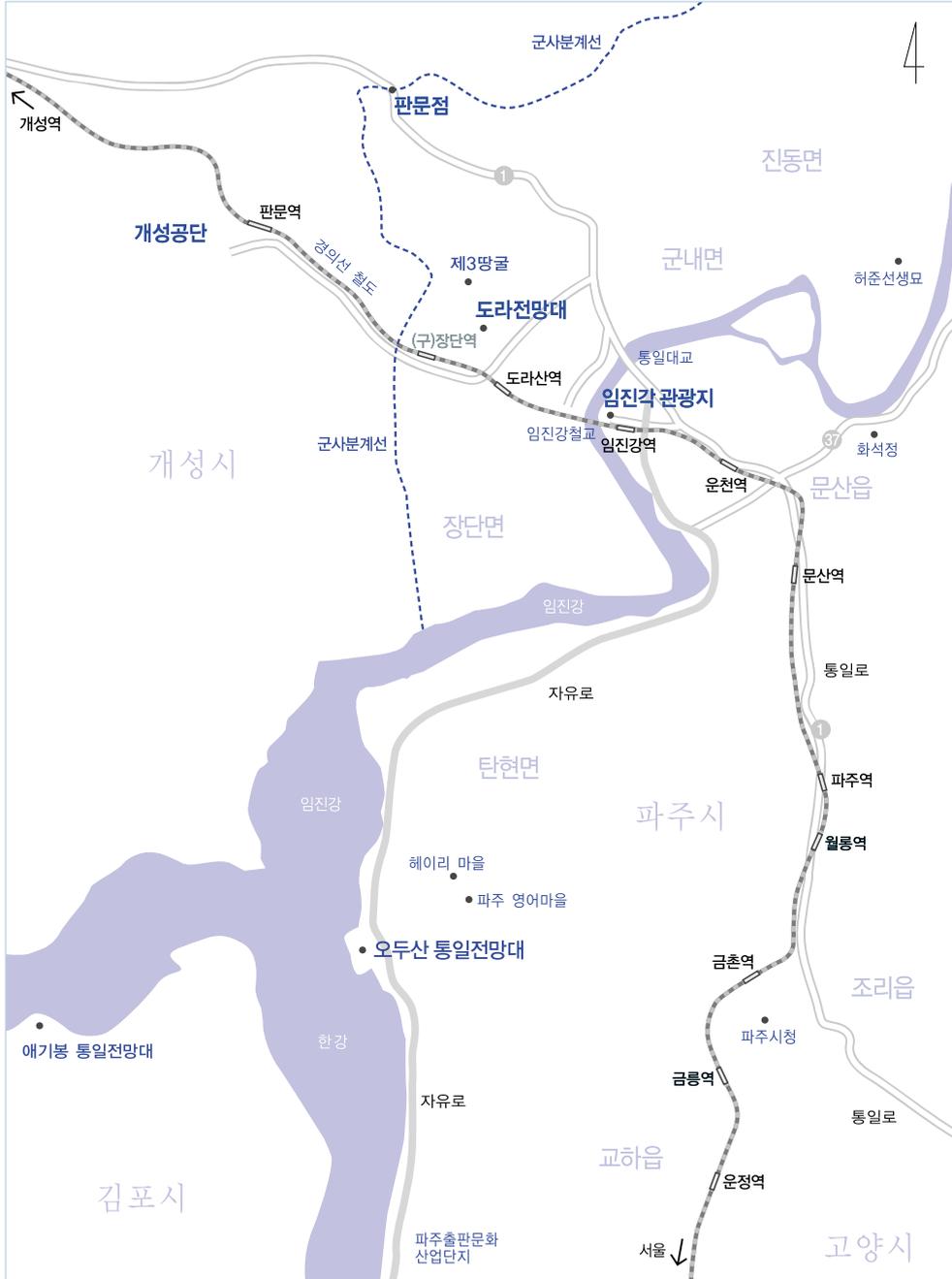
- 11월~2월 : 오전 9시~오후 4시 반
- 3월, 10월 : 오전 9시~오후 5시
- 4월~9월 : 오전 9시~오후 5시 반
- ※ 공휴일에는 30분 연장
- ※ 기상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교통편

서울(2호선 합정역)에서 통일동산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있으며, 버스종점에서 전망대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 ■ 참조/문의

- 웹사이트 : [www.jmd.co.kr](http://www.jmd.co.kr)
- 전화 : 031) 945-3171, 3173, 2390



가볼 만한 통일교육 현장

## 도라산역

도라산역은 경의선 철도의 남측 최북단 역으로,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 인접해 있다. 파주시 장단면에 있는 이 역으로부터 개성공단 입구에 위치한 북한의 판문역까지 거리는 7km, 개성역까지는 17km이다.

이 역의 선로와 승강장은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제선은 북한 왕래에 이용되며, 향후에는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와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도라산역은 2000년 남북 합의에 따라 경의선 철도 연결 공사가 시작된 후 2002년 4월에 개통되었다. 이후 2003년 6월에 남북 철도 궤도의 연결, 2007년 12월부터 문산역~판문역 간 정기화물열차 운행이 이루어졌다(화물 열차 운행은 2008년 12월부터 중단).

경의선 철도로 개성공단 등을 왕래하는 인원과 화물은 도라산역에 있는 경의선 철도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출입경 심사, 통관, 검역 등을 거친다.

도라산역 인근에는 경의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 물류센터, 도라산 평화공원, 도라전망대 등이 있다.

## 도라전망대

파주시 군내면에 있는 도라전망대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 바로 접해 있다. 이 전망대에서는 북한의 기정동(비무장지대 내 마을), 금암골(협동농장)과 개성공단, 그리고 개성 시가지 일부와 김일성 동상 등을 바라볼 수 있다.

전망대 근처에는 도라산역과 제3땅굴이 있다. 제3땅굴은 북한이 남침 목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435m 지점까지 파내려오다 1978년 우리측에 의해 발견된 땅굴이다.

### ■ 도라산역·도라전망대 견학 방법

도라산역과 도라전망대를 견학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즉, ① 임진각 관광지에서 셔틀버스(도라산역·도라전망대·제3땅굴 순회)를 이용하는 것 ② 열차를 이용해 도라산역으로 가서 도라전망대·제3땅굴 연계관광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 ③ 30인 이상 단체로 자체 버스를 이용하는 것 등이다. 월요일과 주중 공휴일에는 휴무이므로 견학할 수 없다.

민간인통제구역에 위치한 도라산역과 도라전망대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임진각 관광지 또는 임진강역에서 출입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진각 관광지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자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진각 DMZ 관광매표소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신청을 한다.

열차를 이용해 도라산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임진강역에서(임진강역까지 열차를 타고 간 경우에는 하차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신청을 한다. 도라산역까지만 가고자 한다면 임진강역에, 연계관광을 하고자 한다면 임진강역 파주관광매표소(031-940-8369)에 출입신청을 한다.

임진강역-도라산역 간은 별도로 운행되는 열차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임진강역-도라산역 간 열차 운행은 하루 3회(임진강발 11:00, 11:40, 12:40) 있으며, 그 중 1회(11:40)는 연계관광이 되지 않는다. 임진강역-도라산역 간에 열차로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은 1회당 최대 300명(도라산역만 방문은 120명, 연계관광은 18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주문화관광 웹사이트([tour.paju.go.kr](http://tour.paju.go.kr) - 파주관광 - 평화체험)를 참조하거나 임진각관광안내소(031-953-4744), DMZ관광매표소(031-954-0303) 등에 문의한다.

**열차-셔틀버스 이용시**   출입신청(임진강역)→열차 탑승→도라산역→셔틀버스 탑승→제3땅굴  
→도라전망대 →(통일촌)→도라산역 →열차 탑승→임진강역

**셔틀버스(30분~1시간 간격) 이용시**   출입신청(임진각 관광지) → 셔틀버스 탑승 →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통일촌 → 임진각 관광지

## 임진각 관광지

임진각 관광지는 남북이산의 한을 달래고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로서 임진강 변에 개발되었다. 임진각은 1972년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에 이곳에 지어진 건물로, 옥상에 전망대가 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5km 떨어진 이곳에는 또 실향민들이 북녘에 있는 가족과 조상에게 배례하는 망배단과, 정전협정 체결 후에 포로들이 남쪽으로 귀환할 때 이용한 '자유의 다리'가 있다. 자유의 다리에는 방문자들이 북녘 고향과 혈육을 그리거나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의 글귀들을 적어놓은 펼침막과 리본 등이 수없이 내걸린다.

임진각 옆 임진강에는 경의선 철도 교량 하나가 복구되어 있다. 경의선 철도는 이제 임진강 철교와 도라산역을 거쳐 북측의 판문역으로 연결되어 있다. 임진강 철교는 당초에 복선이었으나, 6·25전쟁 중에 두 철교가 모두 파괴된 후 하나만 복구되었고 다른 하나는 교각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6·25전쟁 중 1950년 12월 장단역에서 멈춰선 뒤 50여 년간 비무장지대에서 녹슨 채로 있던 증기기관차(화통)는 보존처리를 거쳐 2009년 6월 25일부터 임진강 철교 근처에 전시된다.

임진각 관광지에는 그 밖에 6·25전쟁 전적기념물들, 경기평화센터, 평화누리 등도 있으며, 도라산역·도라전망대·제3땅굴 등을 순회하는 셔틀버스가 이곳으로부터 운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주문화관광 웹사이트([tour.paju.go.kr](http://tour.paju.go.kr)- 파주관광-평화체험)를 참조하거나 임진각관광안내소(031-953-4744)에 문의한다.

### ■ 교통편

- 파주 문산터미널에서 임진각까지 시내버스 운행
- 철도 이용시 임진강역에서 하차하여 도보(10분 소요)로 이동

## 판문점

판문점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의 상징인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져 온 통로이기도 하다.

판문점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진 곳으로, 정전협정의 이행을 위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기구들이 위치한 특수지역이다.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내에서 유엔군사령부 측과 북한측이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을 각각 관할한다.

군사분계선 남쪽 구역에는 남북간의 연락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연락사무소(우리측)가 소재한 ‘자유의 집’ 과, 남북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 이 있으며, 북쪽 구역에는 북측의 판문각과 통일각이 있다. 판문점 근처에는 남과 북의 민간인 마을로서 각각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대성동과 기정동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해 있다.

### ■ 견학신청

판문점 견학은 화~토요일에 할 수 있다. 판문점 견학 희망자는 방문희망일 6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한다. 학교, 정부허가법인, 공무원 등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031-953-6611~4)에, 그 외 일반인은 국가정보원 안보상담센터(국번 없이 111)에 신청한다. 접수처는 30~45명의 단체 견학을 주선하므로, 인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단체 구성 등에 관해 접수처와 협의한다.

판문점 방문에는 약 90분이 소요된다(브리핑 30분, 견학 60분). 방문자는 신분증 휴대, 단정한 복장 착용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서류 양식, 방문자 준수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 남북회담 웹사이트(dialogue.unikorea.go.kr - 판문점 - 판문점 방문/견학)를 참조하거나 접수처에 문의한다.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1989년 5월 정부의 특수자료 공개정책에 따라 설치되었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전문 연구의 활성화를 돕고 있다.

북한의 책자와 영화, 가요 등 북한에서 발행된 자료를 포함하여, 북한 및 통일 관련 각종 문헌자료와 시청각자료 등 국내외의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1990년부터 북한 영화를 상영해 왔으며, 1999년 10월부터는 북한 TV방송 시청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북한 영화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단체신청을 받아 상영하며, 북한실상 설명회도 개최한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2009년 7월까지의 서울 광화문우체국 건물 6층에서 운영되고, 2009년 9월 하순경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구)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 2009년 9월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임.

### ■ 참조/문의

- 웹사이트 : [unibook.unikorea.go.kr](http://unibook.unikorea.go.kr)
- 전화 : (02) 730-6658, 720-2429

##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 시설과 기회 등이 부족한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통일관련 기관·단체간의 통일교육 연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수도권 외의 지역들에 설치되어 왔다.

2009년 현재 10개의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통일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시민 통일강좌, 통일문화 축제 등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통일교육 관계자의 역량 강화 활동 등 사업을 벌이고 있다.

### ■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센터명	운영단체	주 소	연락처
강원동부	코리아하나재단 설악수련원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03 설악수련원	033)636-4936
강원서부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033)248-1780
대전	통일교육위원 대전협의회	대전시 서구 둔산동 1255(BYC빌딩 3층)	042)683-1085
충남·충북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29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041)550-1814
광주·전남	통일교육위원 전남협의회	전남 목포시 향동 6-10 목포항 연안여객선터미널 305호	061)245-2330
전북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통일교육센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063)270-2829
부산	통일교육위원 부산협의회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23-3 동부산대학 601호	051)520-2555
경남	통일교육위원 경남협의회	경남 진주시 칠암동 491-2	055)741-6746
대구·경북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053)950-6626
제주	제주대 평화연구소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1 제주대 평화연구소	064)754-2331

##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웹사이트

### 정부 및 공공기관

기관명	주 소
청 와 대	www.cwd.go.kr
통 일 부	www.unikorea.go.kr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남북회담본부	dialogue.unikorea.go.kr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reunion.unikorea.go.kr
남북경제협력통합지원센터	www.unikorea.go.kr/unieconomy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www.nuac.go.kr
국가정보원	www.nis.go.kr
교육과학기술부 (인터넷통일학교)	www.tongil.mest.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국방부	www.mnd.go.kr
파주시 (파주관광)	www.tour.paju.go.kr (파주관광 - 평화체험)
한국관광공사 (북한관광 정보)	www.visitkorea.or.kr (북한관광 정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www.kidmac.com

### 연구기관

기관명	주 소
통일연구원	www.kinu.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미래전략연구원	www.kifs.org
북한연구소	www.nkorea.or.kr
세종연구소	www.sejong.org
외교안보연구원	www.ifans.go.kr

## 연구기관

기관명	주 소
평화문제연구소	www.ipa.re.kr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한국국방연구원	www.kida.re.kr
한국문화정책개발원	www.kctpi.re.kr
한국발전연구원	www.hanbal.com
현대경제연구원(북한정보뱅크)	www.nk-infobank.com

## 언론기관

기관명	주 소
KBS (아름다운 통일)	office.kbs.co.kr/tongil
KBS (남북의 창)	news.kbs.co.kr/snwindow
MBC (통일전망대)	www.imbc.com/broad/tv/culture/unity
조선일보 (NK조선)	www.nkchosun.com
중앙일보 (북한네트)	nk.joins.com
통일뉴스	www.tongilnews.com
통일신문	www.unityinfo.co.kr

## 대학 · 대학원(연구소)

기관명	주 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ifes.kyungnam.ac.kr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webbuild.knu.ac.kr/~pri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www.peacekorea.or.kr
북한대학원대학교	www.nk.ac.kr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tongil.snu.ac.kr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suny.yonsei.ac.kr/~ikus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cau.ac.kr/~cauind2/ku.html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www.hanyang.ac.kr/code_html/H5EAJG

##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방송프로그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KBS 1TV	남북의 창	토 07:35~08:00
MBC TV	통일 전망대	월 13:35~14:05
KBS 라디오(한민족방송)	통일열차	월~토 00:10~01:00 (16:05~16:55 재방송)
FEBC 라디오(극동방송)	통일을 향하여	토 20:20~21:00
	남과 북이 하나되어	월~토 05:30~06:00

#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287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 6조의 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 삭제<2008.12.31>

#### 제6조(정부의 임무)

- ①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의 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의 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이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 (통일교육협의회)

-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칙 <제5752호, 1999.2.5>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간 생략 -

부칙 <제9287호, 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 통일교육지침서 학교용

---

인 쇄 일 2009년 6월

발 행 일 2009년 6월

발 행 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142-715)  
Tel (02)901-7043,7176 / Fax (02)901-7082

인 쇄 애드원커뮤니케이션즈 (02)2272-7571

비매품

